

광주FC, 리그 퇴출 베리FC 전철 밭지 않으려면



데스크칼럼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cdstone@jnilbo.com

영국 맨체스터 북부에 위치한 소도시 베리를 연고로 하는 축구 클럽 베리FC에게 2019년 8월 27일(현지시간)은 가장 뼈아픈 날이다. 지독한 재정난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리그 퇴출'이라는 철퇴를 맞았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리그1(3부리그)에 속한 베리FC는 1885년 창단해 134년의 역사를 이어온 유서 깊은 구단이었다. 창단 초기에는 1~2부리그를 오가면서 1900년과 1903년 두 차례 FA(잉글랜드 축구협회)컵 우승을 차지했다. 1부리그 최고 성적은 1925~26시즌 4위였다.

2000년대부터는 심각한 재정 압박 속에 3~4부리그를 전전했다. 2018~19시즌 리그2(4부리그)에서 준우승을 차지해 2019~20시즌 리그1(3부리그) 복귀에 성공했지만 구단 경영이 악화되면서 직원은 물론 선수들의 임금까지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임금 체불이 길어지자 잉글랜드 풋볼 리그(EFL)는 규정에 따라 베리FC의 승점을 12점 깎았고, 부채 청산과 구단 운영자금 확보 방안 제출을 요구했다. 하지만 베리FC 구단이 데드라인까지 경영 위기를 타개할 해결책을 마련하지 못하자 EFL은 이사회를 열어 리그 퇴출을 결정했다. 이렇게 베리FC는 축구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앙의 명문 구단 중 하나인 올림피크 리옹도 빛 때문에 2부 리그 강등 위기에 놓였다. 최근 프랑스 현지 매체에 따르면 리옹은 2부 리그 잠정 강등 및 이적 금지 처분을 받았다. 프랑스 축구 재정 감독 기관인 DNCG가 리옹에 이번 징계를 내렸다.

리옹은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본선 무대 단골 손님이다. 그런 리옹이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지 않으면 성적에 상관없이 2부로 강등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광주를 연고로 하는 프로축구 광주FC의 재정 건전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향후 1부리그에서 자동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지난 2010년 12월 16일 광주시민들의 적극적인 프로축구단 만들기 프로젝트로 창단해 2011년 K리그에 첫발을 내민 광주FC는 지금까지 줄곧 열악한 재정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한때 '돈 먹는 하마'라는 비난을 받으며 해체 목소리도 나왔지만 선수단과 사무국, 팬들이 하나로 뭉쳐 위기를 극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프로축구연맹이 지난시즌부터 도입한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로 인해 자본 잠식 상태를 개선하지 못하면 1군 무대에서 탈락할 위기에 놓였다.

'K리그 재정 건전화 제도'는 모기업과 지자체에 의존하는 구단 수익 구조를 바꾸기 위해 추진한 제도로 선수 연봉은 총 수익의 7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 비용 과잉 지출로 인한 재무 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어길 경우 해당 구단은 2030년부터 K리그1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못해 1군 무대 대회에 참가할 수 없게 된다.

광주FC는 현재 부채만 55억원 규모다. 광주FC 구단은 광주시로부터 연 100억원을 지원받는데, 외국인 선수 영입,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진출에 따른 해외 체류 비용 등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3년 24억원, 올해 30억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았다. 현재 대출 자금을 갚지 않아 이자 포함 55억원이 빚으로 남아있는 상태다.

광주FC 구단은 재정난 해소를 위해 광주시에 추경예산 편성 등을 통해 40억원 추가 지원을 요청했지만 광주시의 긴축예산 탓에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올해 2회 추경예산으로 편성을 요구했던 '광주FC ACLE 참가 지원금 10억6700만원'이 전액 삭감돼 광주FC의 적자 운영해소가 어려운 상황이다.

광주FC는 올 초 고대 계상한 예산안을 낸 탓에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여름 이적시장에서 선수를 영입할 수 없는 제재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25개 구단 가운데 유일하게 광주FC만 이달 말까지 올해 결산과 내년 예산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적된 문제가 전혀 시정되지 않은 경우 재무위반 아니라 상벌위가 열려 승점 삭감 등 조처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구단의 '존폐 위기'까지 맞을 수도 있다. 광주FC가 적자 운영 해소를 위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할지 주목된다.

社說

애써 키운 첨단기술 이대로 빼앗길 텐가

민·관 합심해 해결책 내놔야

올해 경찰에 적발된 해외 기술 유출 사례가 2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출 국가는 중국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한다. 해외로의 기술 유출은 한 국가의 경쟁력을 잠먹는 중요한 요인이고 독점적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경우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일이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10월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5건으로 지난 2021년 국가수사본부 출범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 등 국가안보나 경제와 직결되는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이 10건에 달했다고 한다. 실제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해외 영업에 사용될 것을 알면서 피해업체의 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촬영해 공범에게 제공하고 중국 업체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은 피해업체 전 직원 2명과 법인을 입건했다. 서울경찰청도 지난 7월 중국 경쟁업체로 이직한 후 사용할 목적으로 OLED 관련 국가핵

심기술을 사진으로 찍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검거했다.

첨단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술 유출은 일상이 됐다. 수법도 갈수록 대담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반도체나 자율주행차 등 우리나라 핵심 첨단 산업의 기술을 노리고 공장을 통째로 복사하는 대담한 방식까지 출현할 정도다. 국가정보원도 2018~2022 기술 유출 피해액이 약 26조 원을 이유로 추산하고 있다. 우리가 피땀 흘려 쌓아 올린 첨단 기술이 눈 앞에서 해외로 새나고 있는 셈이다. 최첨단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범죄가 빈발하는 이유는 관련 미비하고 적발되더라도 처벌 수위가 낮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산업계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놔야 한다. 최첨단 산업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민·관이 합심해 기술안보라는 튼튼한 자물쇠를 만들고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절차도 필요하다. 애써 키운 첨단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야말로 국가의 경제적 간간을 흔들고 국익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전남 가금류 농가에 찾아든 '겨울 악몽'

영암서 조류인플루엔자 양성

전남 가금류 농가에 가혹한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겨울을 앞둔 전남도내 가금류 농가에서 첫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4일 영암 소재 소규모 토종닭 농장(18수)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달 29일 강원 동해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첫 발생된 이후 가금농장에서는 이번 동절기 4번째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전남도도 가금 사육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24일 오후 10시부터 25일 오후 10시까지

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고정식소독기 및 고압분무기 소독), 계란 운반 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를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전남도는 매년 동절기가 다가오면 많은 가금류 농가에서 AI가 확산돼 왔다. 수만 마리의 닭·오리 등은 살처분됐고, 매년 피해액도 수 백 억원에 달한다. 전남 가금류 농가는 전국 1위이며, 50%가 넘는 수치이다. AI는 치사율과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인 데다 백신이 없어 피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야생동물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하고 철저히 소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기후변화와 인구 이동, 물자 교역이 쉬워지면서 가축전염병은 언제든 유입될 수 있다. 전남 이가축전염병에서 '정정지역'을 유지하려면 강도 높은 차단 방역이 절실히 보인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4일 필리핀 마닐라의 빈민가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가옥들이 불에 타고 있다. 현지 당국은 이번 화재로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최소 2000가구가 집을 잃었다고 밝혔다.

AP/뉴스시스

서석대

또 뒤통수를 맞았다고 한다.

지난 24일 일본 이가타현 사도시 아이카와개발종합센터에서는 최초의 '사도광산 추도식'이 열렸다. 1940년대 1500여명의 한국인이 강제동원돼 혹독한 노역에 시달리며 피를 토한지 80여년, 1967년 일본이 '사도 광산 유적'이라는 이름으로 사적 지정하며 역사 '뉘아내기'를 시작한 지 60여년 만이다.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지 4개월여 만에 개최된 이번 추도식은 일본 정부에서 주관했다라든가 가장 큰 피해국인 한국이 주인공이어야 맞는 자리였다. 하지만 한국 관계자와 유족들을 위해 만들어둔 30여석은 덩그러니 비워졌다. 불참을 통보한 한국 정부의 "자리를 치워 달라"는 요청에도 일본은 보란 듯이 자리를 비워놓고 추도식을 치렀다. 정확히 누구를 추모하자는 취지인지도 알 수 없는 '사도광산 추도식'을 통해 한국은 일본에 또 굴욕당했다.

학습효과라고는 없는 나라냐고 비웃음당해도 할 말이 없다. 일본은 지난 2015년 군함도 유네스코 등재 당시에도 희생자를 기리는 정보센터 설치를 약속했다. 하지만 센터는 군함도 인근이 아닌 도쿄에 설치됐고, 강제성을 부인하



는 자료까지 버젓이 자리했다. 일본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 한국에 또다시 약속을 했다. 우리가 맞닥뜨린 것은 강제노역 문구가 실종된 전시관과 강제성 희석 시도로 점철된 추도식 진행,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에 있는 인사의 파견이었다. 논란의 중심이었던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은 추도식에서 사과를 고사하고 강제노역이나 강제동원 등 '강제'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뱉지도 않았다.

한국은 진정 일본에 대한 '스톡홀름 증후군' (인질이 인질범에게 동화돼 인질범을 옹호하고 경찰을 적대시하는 등 극한의 상황에서 강자의 논리에 의해 약자가 동화되는 이상 현상)에라도 걸린 것일까.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갔다 돌아온 여인들에게 '환향녀'라고 손가락질하고, 해방 후 만신창이로 고향에 돌아온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더럽다'며 침을 뱉듯. 되풀이되는 폭력의 역사에서 본능적으로 억울하고 서러운 피해자 편에 서느니 차라리 가해자의 편에 서는 것이 낫다고 여긴 것일까. "중요한건 일본의 마음"이라며 모든 피해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는 일본에게 뒤통수를 맞으며 정작 누구의 뒤통수를 치고 있는 것인가.

곽지혜 취재1부 기자

全南日報	사창·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정치부	(062)510-0340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